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김성연*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IV. 분석 결과 |
| II.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V. 나가며 |
| III. 데이터와 연구 방법 | |

| 논문요약 |

투표 참여율의 하락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낮은 투표 참여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쟁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투표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였다. 그러나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정책 선호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최근 공개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두 집단의 이념 성향, 7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선호,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이들의 정당 지지, 기본적인 정치적 태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투표 참여에서 전통적인 연령 효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관측된 것과 유사한 소득 효과와 학력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되어 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 기본적으로 낮은 투표 참여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 결과의 왜곡(bias)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결과가 갖는 주요 함의에 대해 논한다.

▪ 주제어: 투표율, 투표 참여자와 투표 불참자, 정책 선호, 선거, 한국

I. 들어가며

민주주의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과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의 차이는 최근의 선거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질문의 하나였다. 1980년대 이후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 참여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Blais et al. 2004, 221), 우리나라 또한 비록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다소 상승하긴 했으나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율(voter turnout)의 전반적인 하락은 많은 정치학자들의 우려를 자아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낮은 투표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와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Lijphart 1997, 1; Verba et al. 1995, 11; Heighton & Wolfinger 2001, 179; Hansford & Gomez 2012, 268).

낮은 투표 참여율에 대한 우려는 규범적(normative) 차원 등 다양한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 대다수는 투표율의 하락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과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고(Heighton & Wolfinger 2001, 179), 둘째는 투표율의 변화, 특히 투표율의 상승이 특정 정당의 득표율이나 당선자 등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었다(Radcliff 1994, 259; Erikson 1995, 404-408; Hansford & Gomez 2012, 268-269).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낮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왜곡(bias)시키고 따라서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 선거의 대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된다. 그러나 만일 투표 참여 집단과 불참집단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다면, 낮은 투표율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만일 투표율의 상승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설혹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 사이에 정책 선호의 차이가 있더라도 낮은 투표율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집단의 정책 선호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예컨대, 강원택(2008, 98-99)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정당 일체감 등 정당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념 성향이나 정책적 선호 등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복경(2010, 109)과 서현진(2009, 131) 또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차이에 주목하였으나 주로 이 두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공개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지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정치적 이념 성향, 재벌 규제 등 7가지 사안에 대한 정책 선호,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issue priority)을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이 두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징, 정당 지지, 그리고 기본적인 정치적 태도 또한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함께 살펴본다. 이것은 이 두 선거의 투표율이 각각 54.2%와 75.8%로 약 20% 이상 차이가 났다는 점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차이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만일 투표율이 낮은 선거와 높은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차이가 동일하다면 이 결과에 더 높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

면서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세 번째 장에서는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 주요 함의에 대해 논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980년대 이후 선거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 참여율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Wattenberg 2001, 1-10).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미국과 스위스를 넘어서 캐나다, 영국, 그리고 핀란드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Blais et al. 2004, 221-236; Gray & Caul 2000, 1091).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이전까지 1987년 13대 대선의 89.2% 등 8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2002년 대선(16대) 70.8%, 그리고 2007년(17대) 6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총선이나 지방자치선거의 투표율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투표율이 각각 54.2%와 75.8%로 이전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져왔다(Verba et al. 1995, 11). 널리 알려진 것처럼, 레이파르트(Lijphart 1997, 1)는 미국정치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 투표율의 하락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democracy’s unresolved dilemma)”라고 선언했다. 투표 참여율 하락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한편으로는 정치 참여, 특히 투표 참여의 일반적인 중요성 등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인 믿음(normative beliefs)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낮은 투표율은 그 자체가 선거 결과 그리고 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legitimacy)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주적 시민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선거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우려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현실적 예측(empirical expectation)과 관련되어 있다. “만일 투

표 불참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그들의 선택은 투표 참여자들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레이파트의 직관은 이러한 생각을 잘 나타낸다. 즉, 투표율이 높아지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투표율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것은 곧 낮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치적 선호가 선거 결과에 과다 대표되는 정치적 불평등(political inequality)이 초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은 일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대체로 고정되어 있고, 나아가 이들이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 등 일정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이것은 결국 낮은 투표율이 특정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의 선호가 선거 결과에 과다 대표되는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투표율의 변화가 특정 정치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이라는 식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투표율의 하락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을 위협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따라서 특정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에 대한 이러한 우려의 근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이 존재한다. 첫째는 투표 참여 유권자 집단과 불참 유권자 집단의 정치적 선호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이고, 둘째는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면 실제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이다. 만일 투표 참여 집단과 불참 집단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다면,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든 그렇지 않든 이것이 심각한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만일 투표 참여율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 간에 정책적 선호의 차이와 관계없이 낮은 투표율이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이에 따라 투표율의 하락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의 대부분은 대체로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투표 참여집단과 투표 불참집단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고(Gant & Lyons 1993, 185; Highton & Wolfinger

2001, 179-192), 둘째는 투표 참여율의 전반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특정 정당, 예컨대 미국의 민주당 혹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득표율이나 누가 당선되는지 등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다(Radcliff 1994, 259; Erikson 1995, 404-408; Grofman et al. 1999, 357; Martinez & Gill 2005, 1248; Hansford & Gomez 2012, 268).

물론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투표 참여율의 하락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의 차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연구 대상 국가, 선거 종류, 연구 시기 등을 막론하고 대체로 일치한다. 즉, 이 두 집단 간에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Teixeira 1992, 1-5; Wolfinger & Rosenstone 1980, 1-10; Studlar & Welch 1986, 139-148; Highton & Wolfinger 2001, 179). 예컨대, 하이튼과 울핑거(Highton & Wolfinger 2001, 179)는 미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에 대한 선호는 일부 복지 이슈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영국 등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tudlar & Welch 1986, 139-148).

투표율의 변화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이와 유사하다. 즉, 투표율의 변화가 특정 정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나아가 이것이 의회 다수당이나 대통령 당선자 등 선거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르넬과 디나르도(Brunel & DiNardo 2004, 28)는 투표 참여율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 195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치러진 13번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다소 상승하지만 이것이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바꿀 정도로 박빙이었던 선거는 1980년과 2000년 대통령 선거 단 두 번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후 마르티네즈와 길(Martinez & Gill 2005, 1248)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연구들은 대체로 레이파트의 “민주주의의 해 결되지 않은 딜레마”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이에 대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최근 한스포드와 고메즈(Hansford & Gomez 2012, 268-288)는 미국 의회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의 증가가 민주당의 득표율을 상당히 상승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당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투표율을 독립변수들 중의 하나로 하여 투표율의 영향을 분석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러한 분석틀에 내재되어 있는 내생성 오류(endogeneity bias)의 문제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를 선거구별 강우량과 같은 도구 변수(instrument)를 이용하여 교정하면 투표 참여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투표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행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동원투표, 도시와 농촌지역의 투표율 차이, 출신 지역, 그리고 선거의 박빙 정도 등의 요인들에 주목하였다(박찬욱 1992, 153; 김재한 1993, 89; 황아란 1996, 285).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투표 참여집단과 투표 불참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서복경 2010, 109; 서현진 2009), 투표 참여 결정 요인들 및 투표율 제고 방안(조성대 2006, 51; 김진하 2008, 5; 김욱 2009, 175), 그리고 투표율의 변화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Lee & Hwang 2012, 1161) 등 그 연구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 참여 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예컨대, 강원택(2008, 75)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투표 참여 유권자들과 불참 유권자들의 차이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정치 일반에 대한 불신, 대통령, 정부, 국회 등 공식적인 국가기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불만 등이 이들의 투표 불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이념 성향이나 정책 선호의 차이 등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복경(2010, 109)과 서현진(2009, 131-134) 또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차이에 주목하였으나, 이 연구들은 이 두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혹은 학력 수준에 따른 정치적 선호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진하(2008, 5) 역시 2007년 대선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특성들을 분석했지만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또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다(Wolfinger & Rosenstone 1980, 1-5; Rosenstone & Hansen 1993; Verba et al. 1978, 1-7; Dalton 2002, 1-5).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일 일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경향적으로 다르다면, 이것은 투표율의 하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불평등이 사회경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널리 알려져 있다.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 거주 지역에서 거주 기간이 길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나 정치 정보 수준 등 정치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개인적인 자원(resources)과 공동체로부터의 느끼는 투표 참여 압력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나이, 소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개인의 자원이 늘어나며, 거주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수록 지역 공동체로부터 느끼는 투표 참여 압력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 참여는 나이가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소득이나 교육 수준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 예컨대, 서현진(2009)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경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에 서복경(2010, 109-129)은 서울시의 각 구별 세입 자료와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소득의

영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보다 최근에 치러진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 집단과 불참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Ⅲ. 데이터와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는 최근에 공개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이다. 이 데이터는 할당 추출(quota sampling) 방식으로 선정된 전국의 성인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전후하여 7차례에 걸쳐 실시된 패널조사 결과이다. 총선을 전후로 하여 1차(3월 말)와 2차(4월 말)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의 5차례 조사는 각 당 대통령후보 경선 시기(3차, 8월 하순), 추석 이후(4차, 10월 중순), 후보자 등록 직후(5차, 11월 말),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6차, 12월 중순), 대통령 선거 직후(7차, 12월 하순)에 각각 진행되었다. 패널 유지율은 67.8-83.3%였으며 평균적으로 약 75% 수준을 유지하였다. 조사 내용에는 응답자들의 나이, 성별, 소득, 교육 수준, 출신 지역 등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특징들은 물론,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 정치적 이념, 정치적 태도, 그리고 다양한 정책 사안에 대한 선호 등이 포함되었다.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 데이터는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몇 가지 중요한 장점들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는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뿐만 아니라 7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이들의 선호 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응답자들의 이념은 표준적인 진보-보수의 11점(0-10점) 척도를 사용하여 1차, 3차, 5차, 7차 조사에 걸쳐 총 4차례 측정되었으며, 정책에 대한 선호는 1차 조사에서 4가지 사안 그리고 4차 조사에서 3가지 사안들에 대해 한 차례씩 조사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FTA 재협상, 재벌 규제, 대북 정책, 복지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가 조사되었으며, 이 4가지 사안들 중 FTA 재협상과 재벌 규제에 대한 선호는 4가지 입장들(예: 재협상 후 시행, 우선 시행 후 재협상, 즉시 시행 등) 중 하나를 고르게 함으로써 측

정되었고, 나머지 2가지 사안은 두 가지 입장(예: 선별적 복지 제공 찬성 혹은 반대) 중 하나를 고르게 함으로써 측정되었다. 4차 조사에서는 안정 대 변화, 경제성장 대 분배, 그리고 안보 대 인권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가 조사되었으며, 3가지 사안 모두 응답자가 2개의 입장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조사되었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판단(issue priority)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와 함께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은 정책 선호를 통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응답자들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은 2차와 6차 조사에서 각각 한 차례씩 조사되었으며, 경제 양극화 완화, 국제경쟁력 강화, 대북관계 개선, 삶의 질 개선 등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도록 함으로써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태도 또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정치적 태도는 1차와 6차 조사에서 한 차례씩 조사되었으며, 응답자들의 정치적 효능감, 자신이 정치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정치인들의 책임감에 대한 판단, 그리고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4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부록 1>은 응답자들의 이념과 효능감 등 기본적인 정치적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과 척도를 나타내며, <부록 2>는 7가지 중 4가지 정책 사안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묻는 설문 문항과 척도를 그 예로써 제시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의 응답자들을 2012년 19대 총선 투표 참여자들과 불참자들, 그리고 18대 대선 투표 참여자들과 불참자들로 구분한 후 각 선거별로 참여자들과 불참자들의 이념 성향, 정책 선호,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등을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투표 참여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binary logit) 분석을 통해 투표 참여 집단과 불참집단 사이에 이념 성향, 정책 선호,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항 로지스틱 분석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교차 분석에 비해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 연구의 목적이 누가 그리고 왜 투표에 참여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이 서로 다른 이념 성향, 정책 선호,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 등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이 두 선거의 투표율이 각각 54.2%와 75.8%로 약 20% 이상 차이가 났다는 점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차이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투표율이 낮은 선거와 높은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차이가 동일하다면 이 결과에 더 높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투표 참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실제 투표율보다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투표율이 거의 항상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투표 기권자들이 투표 참여자들에 비해 여론조사에 참가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고, 둘째는 실제로는 기권했던 응답자들 중 일부가 타인을 시선을 고려하여 투표에 참여했다고 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분석할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도 조사 응답자들의 투표 참여율은 실제 투표율보다 약 10-15% 정도 높았다. 그러나 이것이 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것은 러츠와 마쉬(Lutz & Marsh 2007, 542)가 지적했듯이, 조사 표본에 기권자들이 과소 대표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과 투표에 기권한 응답자들 중 일부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답함으로써 생기는 왜곡이 서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V. 분석 결과

<표 1>은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의 응답자들 중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종속 변수는 투표 참여를 기본 범주로 하는 범주 변수로 조작화하였다(투표 참여=0, 투표 불참=1). 독립 변수들 중 교육 수준은 대학 재학 이하를 기본 범주로 하는 범주 변수이고, 출신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기본 범주로 하는 범주 변수로 하는 범주 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표준적인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현 거주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2년 총선에서의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은 나이, 교육 수준, 그리고 출신 지역 중 대구/경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투표 불참집단이 참여집단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대구/경북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은 소득과 나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두 선거를 함께 고려하면, 나이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소득과 교육 수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과 교육 수준의 계수는 모두 음수로서 같은 방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과 교육 수준 또한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표 1>은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나이, 소득, 교육 수준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표 1>의 결과는 서복경(2010, 1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서현진(2009, 133) 및 그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는 대체로 배치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비해 이 연구가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를 분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행태가 점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며 향후 연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다.

**<표 1>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징:
이항 로지스틱 분석 (기본범주: 투표 참여)**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소득	-0.07	0.05	-0.18†	0.10
나이	-0.07**	0.01	-0.06**	0.02
교육 (대제 이상)	-0.45*	0.20	-0.41	0.37
여자	0.25	0.20	-0.64	0.48
인천/경기	0.27	0.28	0.34	0.49
대전/충북/충남	-0.32	0.31	-0.24	0.55
광주/전북/전남	0.11	0.28	-0.43	0.55
대구/경북	0.49†	0.27	-0.48	0.55
부산/울산/경남	-0.17	0.29	-0.77	0.58
강원/제주/기타	-0.46	0.47	-0.75	0.80
직업 (농/임/어업)	-1.21	1.07	-1.46	1.80
직업 (자영업)	-0.12	0.40	1.06	0.75
직업 (판매/영업/서비스)	0.10	0.35	-0.01	0.81
직업 (생산/기능/노무)	0.11	0.38	0.81	0.74
직업 (사무/관리/전문)	-0.43	0.34	0.02	0.74
직업 (주부)	0.12	0.35	1.26	0.79
직업 (학생)	-0.62	0.41	-0.59	0.98
종교 (불교)	-0.32	0.87	-0.73	1.18
종교 (천주교)	0.22	0.88	-2.24	1.51
종교 (개신교)	0.23	0.85	-0.78	1.17
종교 (없음/모름/무응답)	0.14	0.85	-0.50	1.15
McFadden's R ²	0.12		0.11	
N	1606		1306	

▪ EAI 총선대선패널조사(이내영 2012)

▪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는 굵게 표시. P-value: † < 0.1, * < 0.05, ** < 0.01

<표 2>와 <표 3>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이념 성향, 정책 선호,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issue priority)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표 2>는 이들의 이념 성향과 재벌규제, 대북 정책, 선별적 복지 등 7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선호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며, <표 3>은 이들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issue priority)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두 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투표 참여를 기본 범주로 하는 범주 변수이고(투표 참여=0, 투표 불참=1), <표 2>에서 7가지 정책과제에 대한 선호는 모두 이진 변수(binary variable)로 나타냈으며,¹⁾ <표 3>에서 주요 국정과제는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기본 범주로 하는 범주 변수로 조작화하였다. 또한 <표 1>의 모든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표 2>와 <표 3>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에서 응답자들의 정책 선호는 한 차례만 조사되었으나 이념 성향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따라서 2012년 총선의 경우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은 1차 조사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판단은 2차 조사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이념 성향은 7차 조사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판단은 6차 조사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1) 앞에서 언급했듯이 7개의 정책 사안들 가운데 5개 사안에 대한 선호는 두 가지 입장들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함으로써 측정되었으나 한미 FTA와 재벌 규제는 네 가지 입장들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함으로써 측정되었다. 이 두 사안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이진 변수로 재조정하였다. 재벌 규제의 경우 “재벌개혁은 시장에 맡기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와 “불공정 거래는 규제하고 나머지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재벌 규제 완화로, “재벌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규제 강화로, 그리고 “재벌에 대한 현재 수준의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무응답으로 코딩하였다. 한미 FTA의 경우, “FTA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와 “재협상을 해서 다시 비준해야 한다”는 FTA 반대로,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은 추가 협의를 한다”와 “원안대로 시행한다”는 FTA 찬성으로 코딩하였다.

**<표 2>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
이항 로지스틱 분석 (기본 범주: 투표 참여)**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이념	-0.04 (0.05)	0.05 (0.05)	-0.05 (0.10)	-0.03 (0.10)
한미 FTA (시행)	-0.19 (0.22)	0.09 (0.23)	0.23 (0.39)	0.49 (0.42)
재벌 규제 (강화)	-0.19 (0.21)	-0.12 (0.22)	0.55 (0.38)	0.35 (0.41)
북한 (강경책)	0.20 (0.22)	0.04 (0.24)	0.25 (0.39)	-0.14 (0.42)
복지 (선별제공)	-0.05 (0.22)	-0.09 (0.25)	0.22 (0.41)	0.13 (0.44)
안정 대 변화 (변화중요)	0.57 (0.21)**	0.48 (0.23)*	0.61 (0.38)	0.42 (0.41)
성장 대 분배 (분배중요)	-0.08 (0.22)	-0.17 (0.23)	0.01 (0.39)	0.12 (0.41)
안보 대 인권 (인권중요)	-0.04 (0.22)	-0.30 (0.23)	0.31 (0.40)	0.04 (0.42)
소득		-0.06 (0.06)		-0.23 (0.13)†
나이		-0.07 (0.01)**		-0.07 (0.02)**
교육 (대제 이상)		-0.37 (0.26)		-0.60 (0.46)
여자		0.58 (0.27)*		-0.52 (0.56)
인천/경기		0.15 (0.37)		0.14 (0.59)
대전/충북/충남		0.01 (0.38)		0.03 (0.62)
광주/전북/전남		0.13 (0.37)		-0.39 (0.69)
대구/경북		0.42 (0.35)		-0.12 (0.62)
부산/울산/경남		-0.06 (0.36)		-0.82 (0.72)
강원/제주/기타		-0.72 (0.65)		-1.11 (1.10)
직업 등 기타 통제 변수	
McFadden's R ²	0.01	0.12	0.03	0.14
N	1131	1102	983	957

▪ EAI 총선대선패널조사(이내영 2012)

▪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는 굵게 표시. P-value: † < 0.1, * < 0.05, ** < 0.01

<표 2>는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이념 성향이나 정책 선호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안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모형 1은 두 집단의 이념 성향과 7가지 사안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며 모

형 2는 모형 1의 결과가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통제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검증한다. 우선,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념의 계수는 양 선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선호는 19대 총선의 경우 안정 대 변화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18대 대선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정책 사안이 하나도 없었다. 모형 2의 결과는 이러한 결과가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통제해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²⁾

<표 3>은 양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투표 불참집단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통합, 남북관계 개선, 정치개혁 등 8개 국정과제들의 계수는 양 선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본 범주인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포함해서 총 9개의 국정과제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징들을 통제해도 달라지지 않았다.³⁾

<표 4>는 투표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정당 지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종속 변수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 지지는 새누리당 지지를 기본 범주로 하는 범주 변수로 조작화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양 선거 모두에서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무당파들의 투표 참여가 확연히 낮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서구의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결과와 일치한다(Abramson & Aldrich 1982, 502; 강원택 2008, 75). 다음으로,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는 대체로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2012년 대선의 경우 각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는 대체로 비슷했으며, 2012년 총선의 경우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사회

2) <표 2>의 모든 모형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한 결과, 여성과 직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독립변수들의 VIF 값은 2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변수들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도 <표 2>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3) <표 3>의 모든 모형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한 결과, 여성과 직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독립변수들의 VIF 값은 2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변수들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도 <표 3>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주요 국정과제 인식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 간의 차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경제적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졌다.

**<표 3>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
이항 로지스틱 분석 (기본범주: 투표 참여자)**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국민 통합	-0.36 (0.35)	-0.26 (0.41)	-0.01 (0.66)	0.47 (0.70)
남북관계 개선	0.34 (0.34)	0.57 (0.39)	-0.01 (1.06)	0.32 (1.15)
정치개혁	-0.20 (0.33)	-0.55 (0.38)	-0.30 (0.78)	-0.42 (0.81)
경제성장	0.03 (0.21)	0.28 (0.23)	0.41 (0.42)	0.48 (0.47)
국제경쟁력 강화	0.60 (0.41)	0.60 (0.45)	-1.57 (2.03)	-0.16 (0.33)
삶의 질	0.15 (0.25)	-0.08 (0.27)	-0.04 (0.52)	0.01 (0.53)
국가안보 강화	-0.37 (0.45)	-0.24 (0.48)	-0.70 (1.05)	-0.13 (1.09)
교육개혁	0.01 (0.42)	-0.14 (0.45)	-0.07 (1.06)	0.01 (1.1)
소득		-0.06 (0.05)		-0.13 (0.10)
나이		-0.07 (0.01)**		-0.07 (0.02)**
교육 (대제 이상)		-0.44 (0.21)*		-0.22 (0.42)
여자		0.26 (0.20)		-0.61 (0.54)
인천/경기		0.22 (0.28)		0.01 (0.58)
대전/충북/충남		-0.47 (0.32)		-0.19 (0.61)
광주/전북/전남		0.08 (0.28)		-0.39 (0.61)
대구/경북		0.49 (0.28)		-0.49 (0.61)
부산/울산/경남		-0.14 (0.29)		-0.79 (0.60)
강원/제주/기타		-0.47 (0.47)		-0.48 (0.83)
직업 등 기타 통제 변수	
McFadden's R ²	0.01	0.13	0.02	0.11
N	1650	1591	1221	1178

▪ EAI 총선대선패널조사(이내영 2012)

▪ 주요 국정과제의 기본 범주는 경제적 양극화 완화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는 굵게 표시. P-value: † < 0.1, * < 0.05, ** < 0.01

<표 4> 투표 참여와 정당 지지: 이항 로지스틱 분석 (기본범주: 투표 참여자)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민주통합당	0.36 (0.20)†	-0.18 (0.23)	0.13 (0.46)	0.21 (0.53)
통합진보당	-0.36 (0.37)	-0.87 (0.40)*	-1.54 (3.01)	-1.64 (4.79)
기타 정당	0.30 (0.63)	-0.41 (0.67)	-1.54 (2.79)	-1.61 (4.46)
지지정당 없음/모름/무응답	1.24 (0.20)**	0.76 (0.23)**	0.90 (0.35)*	0.84 (0.43)*
소득		-0.06 (0.05)		-0.17 (0.10)†
나이		-0.07 (0.01)**		-0.06 (0.02)**
교육 (대제 이상)		-0.43 (0.20)*		-0.45 (0.38)
여자		0.18 (0.21)		-0.66 (0.48)
인천/경기		0.33 (0.29)		0.36 (0.49)
대전/충북/충남		-0.22 (0.32)		-0.17 (0.55)
광주/전북/전남		0.31 (0.29)		-0.42 (0.56)
대구/경북		0.50 (0.28)†		-0.34 (0.56)
부산/울산/경남		-0.13 (0.29)		-0.77 (0.58)
강원/제주/기타		-0.40 (0.47)		-0.73 (0.81)
직업 등 기타 통제 변수	
McFadden's R ²	0.04	0.15	0.03	0.14
N	1666	1606	1355	1306

▪ EAI 총선대선패널조사(이내영 2012)

▪ 정당 지지는 새누리당 지지를 기본 범주로 하는 범주 변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는 굵게 표시. P-value: † < 0.1, * < 0.05, ** < 0.01

<표 5>는 2012년 양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기본적인 정치적 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 변수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이며 주요 변수들로는 정치적 효능감, 스스로 정치에 대해 발언하거나 참여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정도, 정치인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예측한 대로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투표 불참집단이 투표 참

여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도 투표 불참집단이 투표 참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리고 다른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지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기권한 원인들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5> 투표 참여와 정치적 태도: 이항 로지스틱 분석 (기본범주: 투표 참여자)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정치 효능감	-0.11 (0.14)	0.07 (0.16)	-0.22 (0.26)	-0.14 (0.28)
정치 참여 능력/자격	0.11 (0.10)	-0.05 (0.11)	-0.16 (0.17)	-0.27 (0.19)
정치인 책임성	-0.32 (0.17)†	-0.39 (0.19)*	-0.48 (0.31)	-0.53 (0.35)†
투표 중요성	-0.54 (0.11)**	-0.55 (0.13)**	-0.47 (0.18)**	-0.57 (0.19)**
소득		-0.04 (0.05)		-0.09 (0.10)
나이		-0.07 (0.01)**		-0.07 (0.02)**
교육 (대제 이상)		-0.29 (0.26)		-0.13 (0.43)
여자		0.33 (0.27)		-0.60 (0.55)
인천/경기		0.43 (0.37)		0.08 (0.59)
대전/충북/충남		0.10 (0.39)		-0.18 (0.61)
광주/전북/전남		0.05 (0.37)		-0.50 (0.63)
대구/경북		0.61 (0.35)		-0.46 (0.62)
부산/울산/경남		-0.06 (0.38)		-0.85 (0.65)
강원/제주/기타		0.08 (0.51)		-0.61 (0.85)
직업 등 기타 통제 변수	
McFadden's R ²	0.03	0.14	0.05	0.15
N	1246	1208	1195	1159

▪ EAI 총선대선패널조사(이내영 2012)

▪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는 굵게 표시. P-value: † < 0.1, * < 0.05, ** < 0.01

종합하면,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는 거의 차이

가 없었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념 성향, 7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선호,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은 대동소이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들의 정당 지지와 기본적인 태도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투표 참여집단과 비교했을 때 투표 불참집단은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았으며,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V. 나가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책 선호를 갖고 있는가는 최근의 투표 참여 연구에서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과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실시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이념적 성향, 7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선호,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정당 지지, 그리고 기본적인 정치적 태도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두 집단의 이념 성향, 정책에 대한 선호,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은 대동소이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북미와 유럽 민주주의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결과들과 일치된다(Teixeira 1992, 1- 5; Studlar & Welch 1986, 139; Highton & Wolfinger 2001, 179). 다음으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여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는 대체로 비슷했으나

무당파의 투표 참여는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낮았으며, 투표 불참집단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투표 참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투표 참여에서 연령 효과와 함께 다소 약하지만 서구에서 관측된 것과 유사한 소득 효과와 교육 수준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이 높았다. 이것은 서복경(2010, 109)의 발견과는 일치하는 반면 서현진(2009, 131-158) 등의 연구 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 참여율이 낮더라도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아도 투표 참여집단의 정책 선호가 과대 대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것이 투표 참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되도록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 결과와 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 그리고 시민교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설혹 투표 참여율이 낮더라도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선거 결과가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낮은 투표율이 초래할 수 있는 선거 결과의 대의 기능 측면에서의 왜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연령 효과와 더불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관측된 것과 비슷한 소득 효과와 학력 효과가 발견된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개인주의화되면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행태가 점차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행태와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 결과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 참여 행태를 분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며 향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2> 응답자들의 정책 선호를 묻는 질문 문항과 척도 (1차 및 4차 조사)

- (재벌 규제) 재벌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어느 입장과 가깝습니까?
 - ① 재벌개혁은 시장에 맡기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 ② 불공정 거래는 규제하고 나머지 규제는 풀어야 한다.
 - ③ 재벌에 대한 현재 수준의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 ④ 재벌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 (대북 정책) 현재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 ①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
 - ②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

- (복지) 현재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 ①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
 - ②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

- (성장 대 분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성장이 더 중요하다
 - ② 분배가 더 중요하다

| 참고문헌 |

- 강원택 (2008). “투표참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2호, pp. 75-102.
- 김 욱 (2009).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 『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1호, pp. 175-196.
- 김재한 (1993). “투표 참여의 합목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9권. 제1호, pp. 89-100.
- 김진하 (2008).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pp. 5-31.
- 박찬욱 (1992).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 후보 인지 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 총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3호, pp. 153-174.
- 서복경 (2010). “투표 불참 유권자집단과 한국 정당체계.”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1호, pp. 109-129.
- 서현진 (2009). “투표 참여와 학력 수준.” 김민진·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동아시아연구원, pp. 131-158.
- 이내영 (2012).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 연구수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5년. 자료번호: A1-2012-0212).
- 조성대 (2006).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pp. 51-74.
- 황아란 (1996).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pp. 285-298.
- Abramson, P. & J. Aldrich (1982). “The Decline of Electoral Participation in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pp. 502-521.
- Blais, A., E. Gidengill, N. Nevitte, & R. Nadeau (2004). “Where does turnout decline come fro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43, pp. 221-236.
- Brunell, T. L. & J. DiNardo (2004). “A propensity score reweighting approach to estimating the partisan effects of full turnout in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Political Analysis*. Vol. 12, pp. 28-45.
- Campbell, A., P. Converse, W. Miller, & 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Dalton, R. J. (2002).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New York, London: Chatham House Publisher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Erikson, R. S. (1995). "Pooling and statistical control: a rejoinder to Radcliff." *American Politics Quarterly*. Vol. 23, pp. 404-408.
- Gant, M. M. & W. Lyons (1993). "Democratic theory, non-voting, and public policy: the 1972-1988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Vol. 21, pp. 185-204.
- Gray, M. & M. Caul (2000). "Declining voter turnou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1950 to 1997: The effects of declining group mobiliz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3, pp. 1091-1122.
- Grofman, B. & G. C. Owen (1999). "Rethinking the partisan effects of higher turnout: so what's the question?" *Public Choice*. Vol. 99, pp. 357-376.
- Hansford, T. G. & B. T. Gomez (2012). "Estimating the Electoral Effects of Voter Turnou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4. No. 2, pp. 268-288.
- Highton, B. & R. E. Wolfinger (2001).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higher turnou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1. No. 1, pp. 179-223.
- Lee, J. & W. Hwang (2012).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1992-2010." *Asian Survey*. Vol. 52. No. 6, pp. 1161-1182.
- Lijphart, Arendt (1997).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s Unresolved Dilem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1, pp. 1-14.
- Lutz, G. & M. Marsh (2007) "Introduction: Consequences of low turnout." *Electoral Studies*. Vol. 26. No. 3, pp. 539-547.
- Martinez, M. D. & J. Gil (2005). "The effects of turnout on partisan outcomes in U. S. presidential elections 1960-2000." *Journal of Politics*. Vol. 67, pp. 1248-1274.
- Rosenstone, S. & J. M.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 Radcliff, B. (1994). "Turnout and the Democratic vote." *American Politics Quarterly*. Vol. 22, pp. 259-276
- Studlar, D. T. & S. Welch (1986). "The policy opinions of British nonvoters: a research not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14, pp. 139-148.

- Teixeira, R. A. (1992). *The Disappearing American Voter*.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 Verba, S., N. H. Nie, & J.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ba, S., K. L. Schlozman, & H.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Verba, Sidney (1996). "The Citizen as Respondent: Sample Surveys and American Democracy Presidential Addr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0. No. 1, pp. 1-7.
- Wattenberg, M. (2002). *Where Have All voters Gon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inger, R. E. & S. J. Rosenstone. (1980). *Who votes?* Yale University Press.

| 논문투고일 : 2015년 11월 10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11월 18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07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4 (2015)

**Policy Preference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Korean Voters and Non-voters: Evidence from the
2012 Korean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Sungyoun Kim

(Dept. of Political Science, Konkuk University)

An important question about voter turnout in representative democracies is whether voters and non-voters differ in their policy preference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However, while a number of studies have investigated various aspects of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few have systematicall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voters' and non-voters' political prefer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tical preference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voters and non-voters in the 2012 parliamentary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Specifically, using "EAI panel studies 2012" I compare the ideological orientation, issue preferences, issue priority, basic political attitude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voters and non-voter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political preference between voters and non-voters. In addition, different from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it turned out that age, income, and education level are positively related to voting participation. The paper also provides a discussion of major implications of the results.

▪ Key words: Voter Turnout, Voters and Non-Voters, Policy Preference, Election, Korea